

건설동향

BRIEF_{ing}

• 주 4.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

- 새 정부 출범, 2018년 이후 7년 만에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
- 건설업,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용이하지 않아
- 주 4.5일제 논의 가속 예상,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

• 日, 중소 건설기업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확대 정책과 시사점

- 日 'i-Construction' 추진 10년, 중소 건설기업 대상 ICT 기술 확산 유도 Start
- 중소 건설기업 대상 건설 ICT 기술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·기술 활용 안내서 및 사례 전파·교육, 연수 등 추진
- 지난 10년간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반 구축, 이젠 실질적 기술 활용에 주력할 시점



주 4.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

- 2018년 이후 7년 만의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,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-

최은정(연구위원 · kciel21@cerik.re.kr)



새 정부 출범, 2018년 이후 7년 만에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

- 새 정부의 출범으로 주 4.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. 주 4.5일제는 주 5일, 40시간 근무에서 하루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4.5일만 일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워라밸(Work and Life)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 - 최근 경기도는 새 정부의 공약에 발맞추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, 이후 제도 정착 여부에 따라 세부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힘.¹⁾
-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, 높은 인력 의존도의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특성상 제도 도입 수용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. 이에 본 고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주 4.5일제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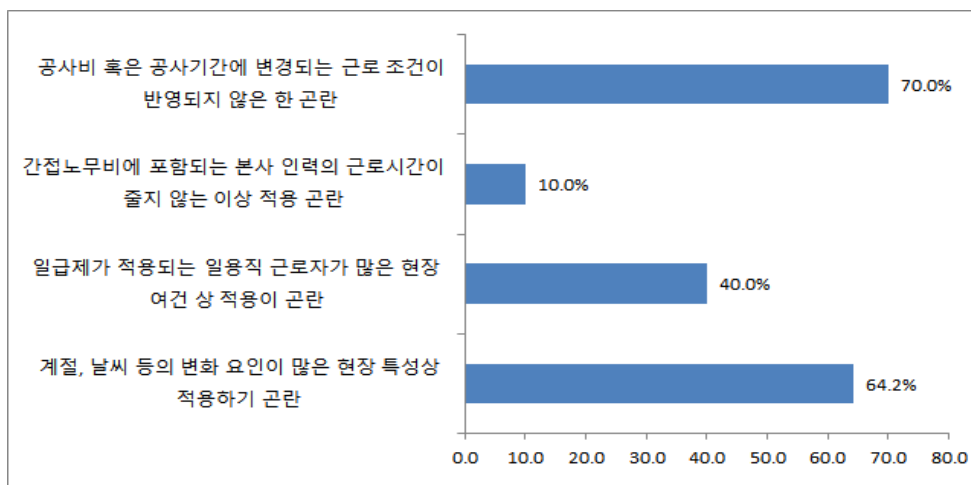
건설업,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용이하지 않아

- 먼저,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과의 연계임. 건설은 특정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제도 변경 등 외부 변동성에 의한 리스크가 큰 산업임.
 - 수주산업의 특성상 생산비용 상승은 계약 변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 제도상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.
 - 또한, 대부분 작업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옥외 산업으로 계절적, 기상적 요인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영향을 크게 받음. 이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는 계획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, 주말 근무, 연장근무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음.

1) 경기도청 경기뉴스광장(2025.6.26.), '경기도가 한다. 주4.5일제, ② 왜 주 4.5일제일까요?'

- 따라서 현재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 4.5일제가 도입된다면 공정 지연, 공사비 상승, 안전·품질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- 한국건설산업연구원(2018)²⁾ 조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‘공사비 혹은 공사기간에 변경되는 근로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한 곤란’이라는 응답이 70%로 1순위를 차지함. 다음으로 ‘계절, 날씨 등의 변화 요인이 많은 현장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’이라는 응답이 64.2%로 뒤를 이음(<그림 1> 참조).

〈그림 1〉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이유(중복응답)



자료 : 최은정 · 최수영(2018), “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”, 한국건설산업연구원.

● 다음으로 인력 및 생산성 측면과의 연계임.

-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5월 기준 15~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체 건설업 취업자(207만명)의 6.3%로 전(全) 산업 평균인 10.6%보다 낮은 상황임.
-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, 건설기술인(81.3%)과 건설기능인(60.0%) 모두 50대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해 청년층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- 반면, 건설업 노동 생산성 지수는 2025년 기준 94.6(2020=100)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음. 이는 전(全) 산업 노동 생산성 지수 107.6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. 즉, 동일하게 투입된 인력이 타(他) 산업보다 더 적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 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.
- 이러한 상황에서 주 4.5일제의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인력 필요, 인건비 증가, 인력난 심화, 중소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-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(2018)³⁾은 법정근로시간 단축(2018년 정부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68

2) 최은정 · 최수영(2018),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, 한국건설산업연구원

3) 최은정(2018), “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”, 한국건설산업연구원.

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) 시행 후 현장의 인력 및 노무비 변화를 조사함. 그 결과, 인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‘변화 없음’에서 ‘최대 2%’(평균 0.9%), 비정규직 근로자는 ‘변화 없음’에서 ‘최대 20%’(평균 2.6%)까지 증가하였다고 답함. 또한,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무비의 증가가 수반되어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모두 ‘변화 없음’에서 ‘최대 15%’까지 증가하였다고 답함(〈표 1〉 참조).

〈표 1〉 2018년 법정근로시간 단축(68시간에서 52시간)으로 인한 인력 및 노무비 변화 설문조사 결과

구분		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대비 현재 변화율	
인력	정규직 근로자 수	최솟값~최댓값	변화 없음 ~ 최대 2% 증가
		평균값	0.9%
	비정규직 근로자 수	최솟값~최댓값	변화 없음 ~ 최대 20% 증가
		평균값	2.6%
노무비	직접 노무비	최솟값~최댓값	변화 없음 ~ 최대 15% 증가
		평균값	4.2%
	간접 노무비	최솟값~최댓값	변화 없음 ~ 최대 15% 증가
		평균값	4.8%

자료 : 최은정(2018), “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”, 한국건설산업연구원.

주 4.5일제 논의 가속 예상,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

-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완책 마련 없이 일률적으로 주 4.5일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. 특히,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 주 4.5일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 첫째,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산정 정책의 개선임. 공공 및 민간 발주처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개정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통한 공정관리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.
- 둘째, 근로시간 운영의 개선임. 본사의 경우 시차 출근, 집중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, 현장의 경우 공정특성, 기상 등 변수 반영이 가능한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.
- 셋째, 인력관리 제도의 개선임. 단축근로에 따른 업무 효율,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집중 근무제 전환의 모범 사례 공유가 필요함. 또한, 현장 내 외국인력, 청년·여성 유입 지원 확대를 위한 직무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.

- 넷째, 사회적 대화 및 소통체계의 고도화임. 주 4.5일제 도입을 전후로 노·사·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보완될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함.
- 마지막으로,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혁신 지원임. 구체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(BIM, 모듈러, AI 등) 활성화를 위해 자동화·생산성 향상 기업에 대한 보상, 세제 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정책 마련이 필요함.

〈표 2〉 주 4.5일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

1	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산정 정책 개선	- 공공 및 민간 발주처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개정 - 공정관리 시스템 디지털화 지원 확대
2	근로시간 운영의 개선	- 유연근무제 적용 기준의 현실화(본사 대상) - 탄력근로제 적용 기준의 현실화(현장 대상)
3	인력관리 제도의 개선	- 교육 및 변화관리 컨설팅(본사 대상) - 외국인력, 청년,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(현장 대상)
4	사회적 대화 및 소통체계 고도화	- 노사정 협의체 상설화를 통한 현장 의견 반영 - 정책 시범사업 및 단계적 확대 과정의 제도적 보완
5	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혁신 지원	- 자동화, 생산성 향상기업에 대한 보상, 세제지원, 기술교육 지원 확대

- 종합해 보면, 산업별·직무별 업무 구조, 생산방식,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정책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.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업종 특성에 맞는 주 4.5일제 모델 개발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한 현실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.
 - 2018년 시행된 법정근로시간 단축(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)으로 건설업체는 한차례 적응 방안을 모색한 경험이 있음.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직 운영의 혁신 방안이 필요함.
- 노동시장의 유연화, 저출산·고령화에 대한 대응 등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 4.5일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.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노·사·정 모두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임.



日, 중소 건설기업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확대 정책과 시사점

- 소규모 공사 대상 기준 정비·활용 안내·교육 및 시범사업을 통한 중소 건설기업 ICT 기술 확산 유도 -

이광표(연구위원 · leekp@cerik.re.kr)

日 'i-Construction' 추진 10년 경과, 중소 건설기업 대상 ICT 기술 확산 유도 Start

- 일본(국토교통성)은 지난 2016년 자국의 건설산업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확보 방안으로 첨단기술(융복합 ICT 기술 등)을 활용한 새로운 건설 생산방식인 'i-Construction' 정책을 추진함.
 - 일본의 'i-Construction' 정책은 최초 발표 이후 10년에 다다르고 있으며, 최근인 2024년 기존 정책을 고도화한 'i-Construction 2.0'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 ICT 등 첨단기술 확산을 꾀하고 있음.
 - 지난 2016년 마련한 'i-Construction' 1단계의 경우 'BIM/CIM 기반 설계 및 데이터 연계', '드론 기반 3차원 측량', '건설기계·장비와 ICT 기술을 융복합한 (반)자동화 시공'에서 출발하였으며, 최근 수립한 'i-Construction' 2단계에서는 이를 확장한 'BIM/CIM 데이터 기반 건설 생애주기 디지털화', '지능형 건설기계·장비 운용을 통한 시공 자동화', '데이터 기반 시공관리 자동화' 등 건설산업의 완전한 '디지털화'·'자동화'·'탈현장화(무인화)'를 목표로 두고 있음.
- 'i-Construction'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산업 내 실질적인 기술의 도입과 활용, 확산이 중요하며, 일본 역시 기술 도입·확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'관련 사업 발주 확대', '발주시기 평준화', '각종 기업지원책' 등을 펼쳐옴.⁴⁾
 - 예를 들어, 일본은 '국토교통부 직할공사 대상 건설 ICT 기술 반영' 사업을 추진하며, '발주시기 평준화'를 통해 특정 시기 집중 발주에 따른 '관련 인력 및 장비 부족 현상' 등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함.
 - 이 외에도 일본 중소기업청, 경제산업성 등에서 추진하는 전(全) 산업 대상의 ICT 기술 확산을 위한 보조금·세제 우대·저리 융자 등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 도입을 유도하고 있음.

4) 세부 내용은 우리원에서 발간한 『건설동향브리핑』 942호, 989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.

- 한편,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 ICT 기술이 반영된 직할공사 수행 경험 분석 결과, 중소 건설 기업의 사업 수행 비중이 낮게 나타난 점⁵⁾을 지적하며 산업 내 건설 ICT 기술 확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‘중소 건설기업 대상의 건설 ICT 시공 보급 촉진 방안’⁶⁾을 수립함.
 - 건설산업 내 ICT 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기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뿐만 아니라, 중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 건설기업 차원의 기술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, 대형 건설기업 대비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설 ICT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인적·물적 역량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, 일본의 이러한 대응 방향은 합리적인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.
- 일본이 최근 수립한 ‘중소 건설기업 대상 건설 ICT 시공 보급 촉진 방안’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 내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.
 - 특히, 지난 2017년 ‘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’을 시작으로 우리 건설산업 내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적·제도적 기반을 지속 조성해 온 점을 고려할 때, 이제는 실질적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 고도화가 요구되는 시점임.
 - 산업 전반에의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기업의 실질적 기술 활용은 물론, 중소 건설기업 차원의 기술 도입 및 확산이 필수적이며, 향후 건설산업 스마트화 가속화의 관점에서 중소 건설기업 및 중소규모 사업 내 기술 확산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중소 건설기업 대상 건설 ICT 기술 확산을 위한 기준 정비·기술 활용 안내서 및 사례 전파·교육, 연수 등 추진

- 일본의 ‘중소 건설기업 대상 건설 ICT 시공 보급 촉진 방안’은 크게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‘건설 ICT 기술 실시요령’과 ‘ICT 시공 기술 안내서’, 건설기업 및 인력 육성을 위한 ‘교육 및 연수’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.
 - 먼저, ‘건설 ICT 기술 실시요령’ 관련해서는 소규모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형 머신 가이던스 굴삭기의 시공 방법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준공 측량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 중이며, 최근에는 소형 머신 가이던스 굴삭기 버킷에 3차원 좌표를 취득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한 준공 측량 기준 정비를 실시함.
 - 다음으로, 국토교통성은 지난 2024년 소규모 현장에의 ICT 시공 도입 촉진을 위한 ‘ICT 시공 기술 안

5) 국토교통성(2024), “i-Construction 2.0 추진 현황 : 중소 건설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”.

6) 국토교통성(2025), “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ICT 시공 보급 촉진을 위한 추진 방안”.

내서'를 마련하였으며, 주요 내용으로 '3차원 측량 기술' 및 '소형 ICT 건설기계'에 대한 소개와 '소규모 공사에서의 ICT 시공 기술 활용 사례'를 포함하고 있음.

- 마지막으로 공공 발주자 및 중소 건설기업, 인력 육성을 위해 다양한 '교육 및 연수' 활동을 펼치고 있음. 구체적으로 '국토교통성의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인력·조직 양성', '지방자치단체 공무원(발주자), 건설기업, 컨설턴트 등 대상의 교육·연수', 'ICT 시공 경험 보유 건설기업이 미경험 기업에 자문 및 조언을 실시하는 어드바이저 제도', 'i-Construction 및 인프라 DX를 위한 인재 육성 센터 개설', '건설 ICT 기기 및 시공관리시스템을 적용한 항만공사 시범사업 실시' 등을 예로 들 수 있음.
- 이 외에도 국토교통성이 운영하고 있는 'ICT 건설기계 등의 인정제도'의 확대를 통해 '틸트로테이터 장착 유압 굴삭기' 등 ICT 시공 신기술 도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.

〈표 1〉 일본의 중소 건설기업 ICT 시공 보급 촉진 방안

구 분		세부 내용
실시요령 등	소규모 공사 ICT 시공 실시요령	• 소규모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형 머신 가이드(Machine Guidance) 굴삭기를 적용한 시공 방법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준공 측량(형상관리) 방법에 관한 기준 정비(2022년부터 적용) • 소형 머신 가이드 굴삭기 버킷 끝부분에 3차원 좌표를 취득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한 준공 측량(형상관리) 기준 정비(2025년부터 적용)
	소규모 공사용 ICT 시공 기술 안내서	• 소규모 현장에서의 ICT 시공 도입 촉진을 위한 '소규모 공사용 ICT 시공 기술 안내서' 작성(2024년도) → 소규모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3차원 측량 기술 및 소형 ICT 건설기계 소개, 소규모 공사에서의 ICT 시공 기술 활용 사례 안내
안내서 등	시공 신기술 도입 활성화 (틸트로테이터 등)	• 'ICT 건설기계 등의 인정제도'를 확대하여 협소한 현장에서의 굴착 작업이나 소규모 토공 작업을 중심으로 인력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틸트로테이터 장착 유압 굴삭기 등을 새롭게 '인력 절감형 건설기계' 인정 대상에 포함(2024년) • 2025년부터 '인력 절감형 건설기계'로 인정된 틸트로테이터 장착 유압 굴삭기 등의 노동 절감 효과 등 조사
	ICT 시공 인력의 육성 및 지원	• 중소 건설기업 대상 ICT 시공 보급 촉진을 위해 ICT 시공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이 가능한 인재와 조직을 전국 단위 육성(2021년 시작) • 국토교통성이 ICT 시공 전문가를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'인재·조직 육성' 지원
교육 및 연수 등	ICT 시공 연수, BIM/CIM 연수	• ICT 시공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정비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(발주자) 및 건설기업,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실시(2016년 시작) • 대면 및 온라인 연수 병행, 이론 교육 및 실습을 포함한 다양한 강의 실시
	ICT 자문 (어드바이저) 제도	• ICT 시공 경험을 보유한 건설기업이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언 및 자문(2016년 시작)
	i-Construction 및 인프라 DX 인재 육성 센터	• 지방정비국에 i-Construction 및 인프라 DX를 위한 '인재 육성 센터' 개설 • i-Construction 및 인프라 DX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발주자, 민간 기술자 등 대상의 BIM/CIM 활용, ICT 시공 보급 촉진, 데이터/디지털 기술 습득 등을 위한 연수 및 강습 실시
	항만공사 대상 시범사업	• 중소 건설기업의 ICT 기기 활용 확대 및 기술 향상, 문서 작성 시간 단축 등을 목표로 ICT 계측기기 및 시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시범사업 실시(2024년) • 시범사업 수행에 맞춰 'ICT 기기를 활용한 작업 결과 측정 방법', '항만 정비 BIM/CIM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3D 모델 열람 방법' 등의 설명 영상을 온디맨드(on-Demand) 방식으로 배포

주 : '틸트로테이터'란 굴삭기 버킷의 기울임, 젖힘 등의 작업을 360도로 정교하게 수행해 주는 장치를 말함.

자료 : 국토교통성, 2025.

지난 10년간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반 구축, 이젠 실질적 기술 활용 및 산업 정착에 주력할 시점

- 정부가 추진해 온 ‘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(2022)’ 등 각종 노력에 따라 우리 건설산업 내 활용 가능한 기술 저변 조성, 대형 건설기업 중심 기술 활용 확대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기반은 일정 수준에 이르렀으며, 이제는 산업 전반으로의 확대 및 정착에 초점을 맞출 시점으로 판단됨.
 - 특히, 건설산업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‘BIM’ 등 일부 기술이나 ‘대형 건설공사’ 및 ‘대형 건설사’ 등 특정 공사 또는 수행 주체에 한정되지 않고, 산업 전반에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이 확산되어야 하기에 이제는 중소규모 건설공사 및 중소 건설기업 대상의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.
 - 또한,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대형 건설기업 대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위한 인적·기술적·경영적 측면의 역량 및 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, 정부의 정책 추진을 통한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한 영역임.
- 이를 고려할 때, 전술한 일본 정책 사례는 향후 중소규모 건설공사 및 중소 건설기업 대상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.
 - 첫째, 중소규모 건설공사 대상 활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 검토 및 선정이 요구됨. 일본의 경우 소규모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‘소형 머신 가이던스 건설기계’, ‘스마트 기기 기반 준공 측량’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 중이며, 우리 역시 ‘스마트 안전장비’ 외 ‘자동화 건설기계 고도화’ 등 중소규모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각종 기술을 명확히 도출할 필요가 있음.
 - 둘째, 중소규모 현장에 적합한 기준 정비,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정보 및 적용 사례 전파 등 기술 활용 환경 조성이 필요함. 특히,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기술 활용 의지가 있더라도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종류는 물론, 활용 방법, 개별 기술의 장·단점 등 정보 획득이 취약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.
 - 셋째, 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연수는 필수적이며, 우리 정부 역시 발주기관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. 이에 더해 향후 다양한 주체 및 기술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, 기술 실습 확대 등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.
- 물론, 우리 정부(국토교통부 등) 역시 ‘자동화 건설기계 개발’, ‘시방서, 설계기준, 비용 산출기준 등 각종 건설기준 정비’, ‘스마트 건설기술 우수사례집 마련’, ‘스마트 건설기술 시범사업 추진’, ‘발주청 역량 강화 및 스마트 건설 전문가 양성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, 이제는 활용 주체별·공사 규모별 정책 고도화를 통해 기술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